

서울시 가계의 소비구조 분석

2011. 8. 8 제95호

김범식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목 차 〉

요약

- I . 서울시 가구의 기본 특성
- II . 서울시 가계의 소비구조와 주요 특징
- III . 정책적 시사점

요 약

식료품, 교육, 교통 등 4대 비목의 지출비중이 60% 이상이고, 가계소비의 서비스화 확대

2008년 서울시 가계의 4대 지출비목은 식료품, 기타소비, 교육, 교통 등이며, 이들의 지출비중은 66.1%에 달한다. 식료품 지출비중은 25.6%로 1위이지만 그 비중은 1990년 대비 6.0%p 축소되었다. 반면 교육은 13.1%로 1990년 대비 4.1%p 증가해 가장 크게 확대되었고, 통신의 순위는 1990년 11위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5위로 크게 상승했다. 2008년 서울지역 가계지출의 서비스화 수준은 38.9%로 1990년 대비 11.0%p 확대되었는데, 주로 통신, 교육, 교통 등이 주도했다. 이는 서울지역 가계지출의 서비스화가 기존 통념과 달리 여가활동이나 의료보건보다 정보화 관련 서비스와 교육육구 충족 등을 위한 서비스에 집중되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교육의 소득탄력성은 1.331로 나타나 선택재적 성격이 뚜렷했다. 이는 서울지역 가계가 소득이 증가할 경우 우선적으로 교육관련 지출을 확대할 의향이 있고, 교육서비스에 대한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 측면에서 오는 만족감을 더 크게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행태는 가구주 연령대, 가구유형 및 소득계층별로 차별화

연령별로는 40대 가구주 가계가 가장 특징적인데 이들의 교육지출 비중은 23.3%로 전가구 평균을 10.2%p나 상회하고 다른 서비스관련 지출비중은 모두 전가구 평균을 하회한다. 이는 40대 가구주 가계가 다른 비목에 대한 지출을 최대한 축소하고 교육비목 관련 지출에 모든 자원을 동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구유형별로 보면, 노인가구는 주로 식료품, 의료보건 등에, 모자가구는 교육관련 지출에 집중되어 있다. 노인가구의 경우 건강에 대한 수요가 크고, 모자가구는 여성가구가 생계를 위해 타기관에 양육 및 교육을 맡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득계층별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식료품 비중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교육 및 교통 비중이 증가한다. 저소득층의 소비수준은 전가구 평균의 58.4%인 반면, 고소득층은 1.59배로 소비수준의 격차가 있지만, 가계의 소비불균등 지수는 1990~1997년 중 0.283에서 2000~2008년 중 0.273으로 소폭 하락해 소비불균등 정도가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소비패턴을 고려한 유망산업 육성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가계의 소비특성을 감안할 때,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설정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소비의 서비스화를 고려한 의료보건, 교육, 교양오락 등 유망산업 육성을 통해 '소비-생산-소득'의 선순환적 구조를 강화한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U-IT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해 U-헬스케어산업을 조기 육성해 산업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은 학원 등 오프라인 위주의 교육산업에서 탈피해 유아-학생-직장인-노인 등 생애별 온라인 교육서비스(e-learning) 및 교육콘텐츠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구속성별 소비패턴을 고려해 적재적소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 저소득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의료보건 복지서비스와 모자가구 등 여성가구 주 가구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보육서비스를 확대해 가계의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I. 서울시 가구의 기본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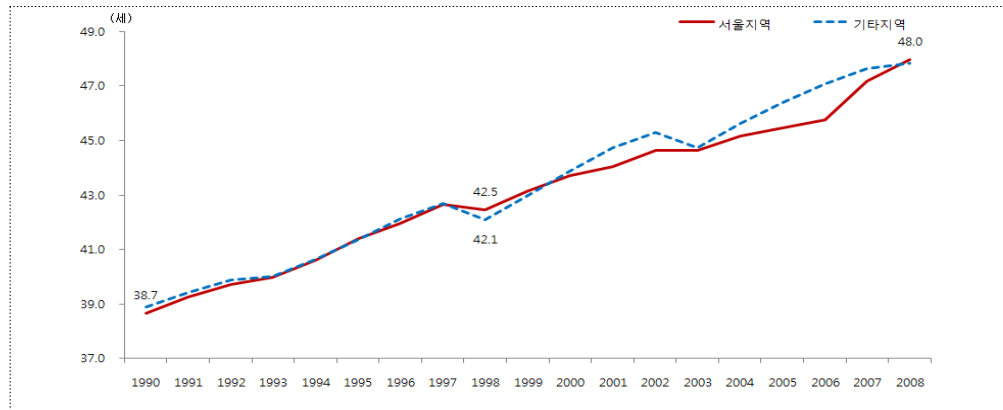
가구주는 주로 40대 내외의 남성으로 높은 교육수준 보유

□ 서울지역 가구의 가구주는 대부분 남성이지만, 외환위기 이후 여성가구주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는 추세

- 2008년 현재 서울지역 가구의 가구주는 79.9%가 남성이며, 여성가구주 비중은 20.1% 수준
 - 기타지역의 남성가구주 비중도 80.8%로 서울과 유사
- 여성가구주 비중은 서울과 기타지역 모두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특히 서울지역의 증가추세가 높음
 - 서울지역의 여성가구주 비중은 1990~1997년 중 12.3%에서 2000~2008년 중 18.9%로 6.6%p 확대
 - 반면, 같은 기간 중 기타지역의 여성가구주 비중은 14.7%에서 18.7%로 4.0%p 확대되는데 그침

□ 2008년 서울지역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약 48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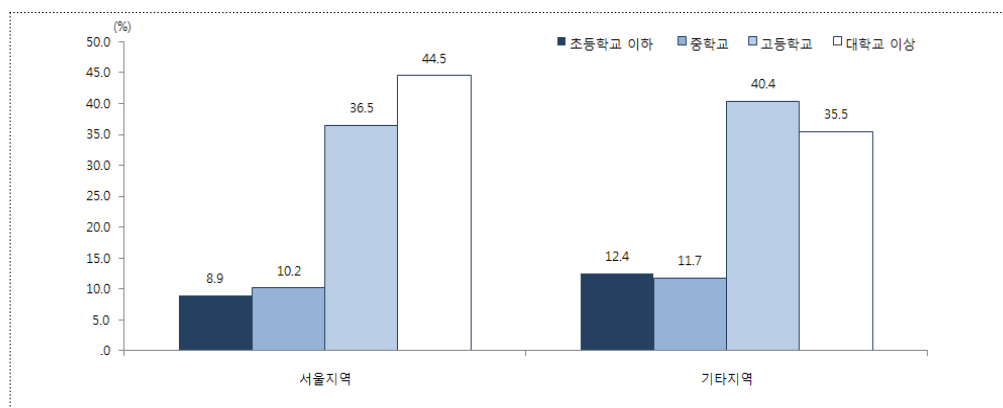
- 가구주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이 가장 큰 빈도를 보이나, 정규분포와 비교할 때 60대 후반에서 70대 중반 연령층도 큰 편
- 2008년 서울지역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1990년(38.7세)에 비해 약 9.3세 상승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이는 사회전반에 걸친 인구의 고령화 현상, 교육기간 연장, 결혼 적령기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1] 서울 및 기타지역 가구주의 평균 연령 추이

- 2008년 서울지역 가구주 중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 비중은 44.5%로 기타지역(35.5%)을 9.0%p 상회
- 서울과 기타지역 모두 1990년 이래 고학력화가 진행되었으나, 특히 서울은 2003년부터 대학 이상 학력 가구주 비중이 고교학력 가구주 비중을 상회하기 시작
- 서울지역 가구의 대학 이상 가구주와 고교학력 가구주 간 비중 차이 : 1990년 -19.1%p → 2003년 8.3%p → 2008년 8.0%p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2] 서울 및 기타지역의 가구주 교육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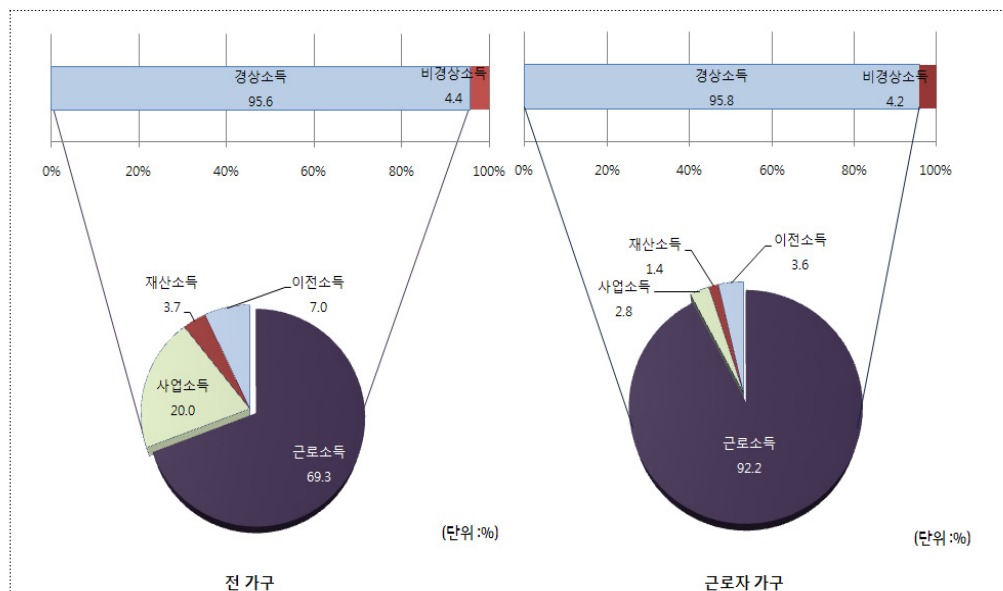
서울의 가구는 일반가구, 2세대가구, 근로자가구 위주로 구성

- 가구유형별로 본 서울지역 가구는 일반가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2008년 서울지역의 가구유형은 일반가구(67.7%), 맞벌이가구(24.7%), 노인 가구(4.7%), 모자가구(3.0%)의 순
 - 노인가구는 65세 이상 가구원과 18세 미만 가구원으로 구성
 - 모자가구는 여성가구주 가구 중 엄마와 18세 미만 미혼자녀로 구성
 -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인구구조의 고령화 등으로 일반가구 비중은 축소되는 대신 맞벌이가구 및 노인가구의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
 - 일반가구 : 1998년 73.5% → 2008년 67.7%, 맞벌이가구 : 1998년 21.2% → 2008년 24.7%, 노인가구 : 1998년 2.9% → 2008년 4.7%
- 세대구분으로 본 서울의 가구구조는 2세대 가구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
 - 2008년 서울지역 가구 중 2세대 비중은 74.1%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은 1세대(17.7%), 3세대(8.1%), 4세대 이상(0.1%)의 순
 - 외환위기 이후 2세대 가구 비중은 75% 내외를 유지하는 가운데 3세대 가구는 줄어든 대신 1세대 가구가 확대
 - 또한 세대가구의 소규모화 등으로 서울의 평균 가구원수도 1990년 이래 2003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감소(1990년 3.97명 → 2008년 3.32명)
- 서울지역 가구는 절반 이상이 근로자가구이나, 그 비중은 과거에 비해 축소
 - 근로자가구 비중은 1990년 64.1%에 달했으나, 외환위기 당시 54.9%로 축소된 후 2000년대 들어서도 57% 내외를 유지(2008년 58.1%)

- 이는 기업의 구조조정이 일상화된 데다가 기업의 생산방식도 노동절약적 방식으로 전환되었기 때문

가계소득 수준은 기타지역보다 높지만 노인·모자가구 등의 소득구조가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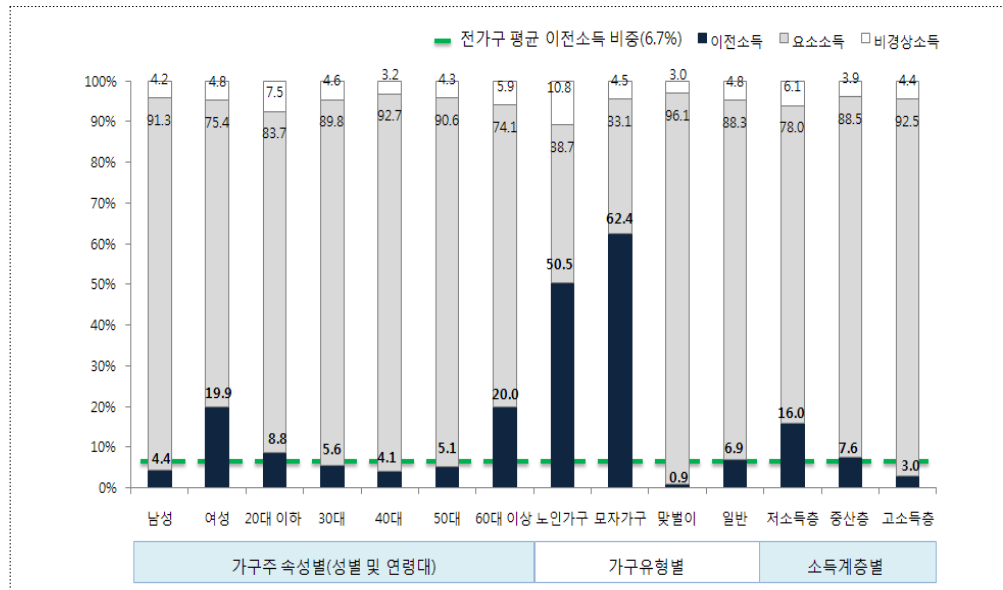
- 서울지역의 가계소득은 대부분 경상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소득 중에서는 근로소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2008년 전가구의 가계소득 중 경상소득 비중은 95.6%, 근로자가구의 경상소득 비중은 95.8% 수준
- 2008년 전가구의 경상소득은 근로소득(69.3%), 사업소득(20.0%), 이전소득(7.0%), 재산소득(3.7%) 순으로 구성
- 특히 근로자가구의 경상소득 내 근로소득 비중은 92.2%로 매우 높음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3] 2008년 서울지역 가구의 소득원별 비중

- 서울지역 가구의 실질소득 수준은 기타지역 수준을 상회
 - 2008년 서울지역 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323만원으로 기타지역 대비 1.07배 수준
 - 실제 소비여력을 의미하는 실질가처분소득은 285만원으로 실질소득의 약 88% 수준
 - 그러나 2003년 이후 서울지역 가계의 소득증가세가 기타지역을 하회하면서 2003년 이후 서울과 기타지역 간 소득격차가 축소되는 경향
 - 기타지역 대비 서울지역 가구의 실질소득 : 2003년 1.20배 → 2005년 1.12배 → 2008년 1.07배
 - 2003~08년 중 기타지역 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연평균 2.6% 증가한 데 비해 서울지역 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연평균 0.2% 증가
- 가구 속성별로는 노인가구, 모자가구, 저소득층가구 등의 소득구조가 취약
 - 노인가구와 모자가구는 총소득(경상소득+비경상소득) 중 절반 이상을 이전소득에 의존
 - 2008년 서울지역 노인가구와 모자가구의 이전소득 비중은 각각 50.5%, 62.4%
 - 2008년 서울지역 전가구의 이전소득 평균 비중은 6.7%
 - 또한 여성가구주와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의 이전소득 비중도 모두 20%를 상회하면서 근로소득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
 - 1~3분위 소득계층인 저소득층 가구의 이전소득 비중도 16.0%로 높은 편



주: 요소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의 합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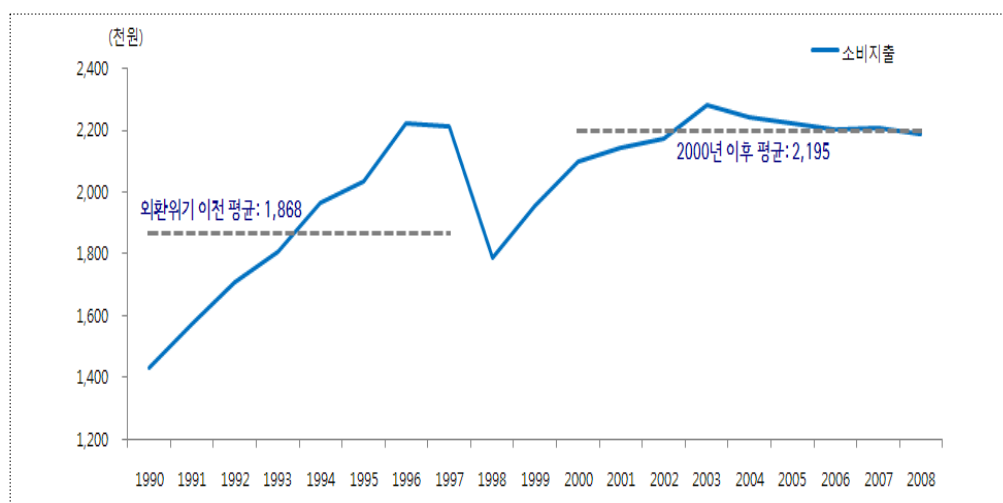
[그림 4] 2008년 가구 속성별 총소득 내 소득원별 비중

- 특히 노인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가운데, 소득증가세도 매우 열위
 - 노인가구의 2008년 월평균 실질소득은 133만원으로 전가구 평균의 41.1%에 불과하고, 2003~2008년 중 실질소득증가율도 -6.8%로 최저수준
 - 이에 비해 모자가구 및 여성가구주 가구는 소득수준이 낮지만, 소득증가율은 전가구 평균 수준을 상회
 - 여성가구주 가구와 모자가구의 2008년 실질소득은 각각 263만원, 236만원이며 2003~2008년 중 연평균 1.7%, 2.7% 증가
 - 반면, 30대와 40대 가구주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월평균 실질 소득수준도 높고, 소득증가율도 서울지역 전가구 평균수준을 크게 상회
 - 가령, 2008년 맞벌이가구의 실질소득은 437만원으로 일반가구 소득(307만원)의 1.3배에 달하고 2003~2008년 중 연평균 소득증가율도 2.4% 수준

II. 서울시 가계의 소비구조와 주요 특징

소비규모는 과거보다 커졌으나, 평균소비성향은 하락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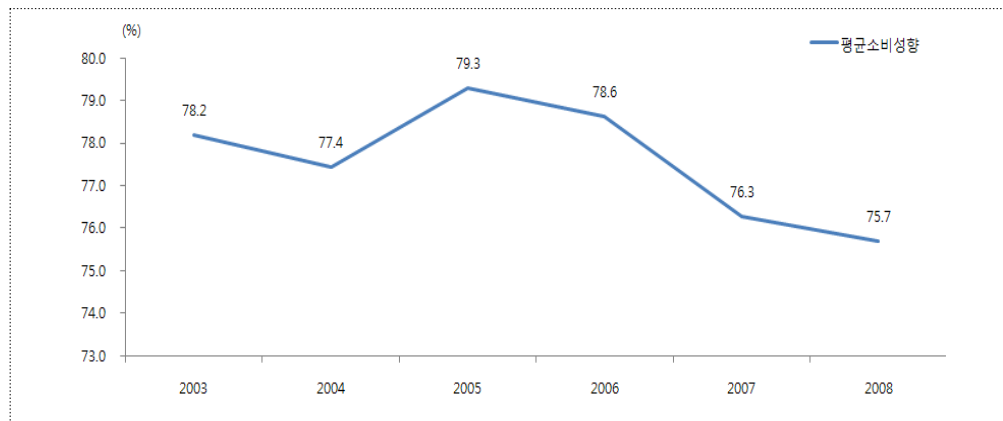
- 2000년 이후 서울지역 가계의 소비규모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확대되었으나, 증가세는 크게 둔화
 -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비지출액은 1990~1997년 중 187만원에서 2000~2008년 중 220만원으로 약 1.2배 확대
 - 2008년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비지출액은 약 219만원
 - 그러나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비지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1990~1997년 중 6.4%에서 2000~2008년 중 0.5%로 둔화
 - 이는 소비의 원천인 가계소득 증가세가 외환위기 이후 둔화되었기 때문
 - 가령, 서울지역 근로자가구의 실질가처분소득증가율은 1990~1997년 중 11.8%에서 2000~2008년 중 2.3%로 둔화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5] 서울지역 가구의 실질소비지출액 추이

- 이러한 가계소비의 둔화는 평균소비성향의 하락에서 뚜렷하게 확인
 - 서울지역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2003년 78.2%에서 2008년 75.7%까지 연 평균 0.6%p 감소
 - 이는 서울지역 가계가 가처분소득의 75.7%를 소비에 사용하고, 나머지 소득은 저축이나 부채상환 등에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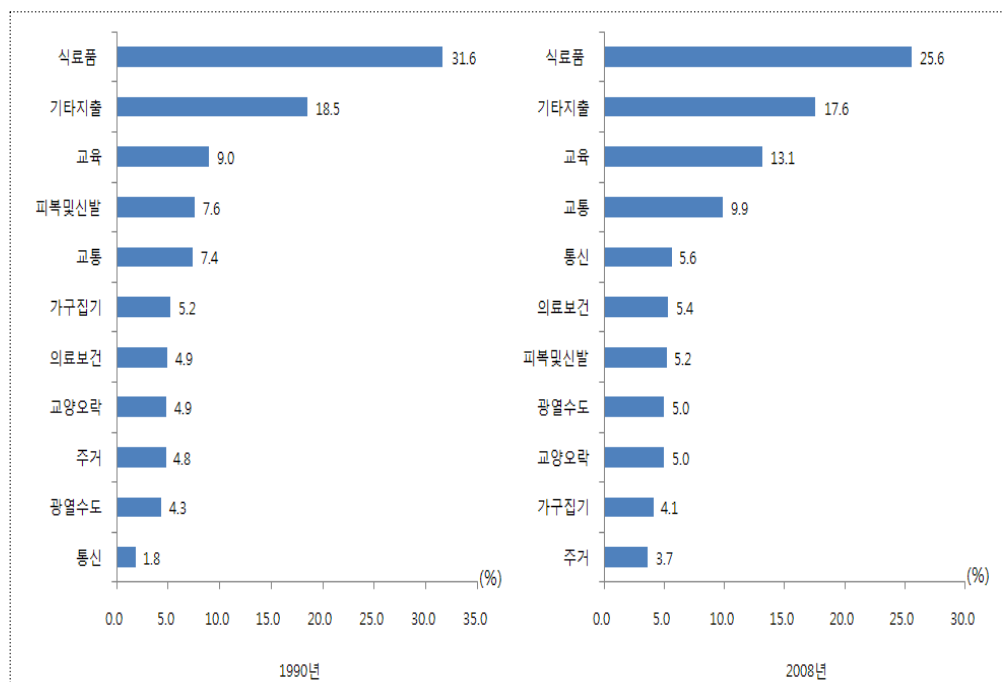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6] 서울지역 가구의 평균소비성향 추이

식료품, 교육, 교통 등 4대 비목의 지출비중이 60% 이상 차지

- 서울시 가계의 소비구조는 주로 식료품, 기타소비, 교육, 교통 등에 집중된 형태
 - 2008년 서울시 가계의 비목별 소비지출 비중은 식료품(25.6%), 기타소비지출(17.6%), 교육(13.1%), 교통(9.9%), 통신(5.6%), 보건의료(5.4%) 등의 순
 - 식료품의 경우 1990년 이래 부동의 1위 지출비목이지만, 그 비중은 1990년에 비해 6.0%p 축소

- 이는 식료품이 필수품으로 일정 수준은 소비해야 되지만, 소득이 증가해도 그 이상은 소비하지 않는 엥겔법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
- 이밖에 피복 및 신발(-2.4%p), 주거(-1.1%p), 가구집기(-1.1%p) 등도 1990년 대비 비중이 축소되었으며 특히 피복 및 신발은 1990년에 지출 비중 순위가 4위로 높았으나, 2008년에는 7위로 하락
- 교육은 1990년과 2008년 모두 지출비중 순위 3위로 동일하지만, 그 비중이 1990년 대비 4.1%p 증가로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되었고, 통신과 교통, 의료보건 등도 지출비중의 순위와 크기가 모두 상승
- 특히 통신의 경우 지출비중 순위가 1990년 11위에서 2008년 5위로 크게 상승했고, 그 크기도 1990년 대비 3.8%p 확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7] 서울지역 가구의 비목별 소비지출 구성비

- 한편 서울지역 가계지출의 서비스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 가계소비의 서비스화는 통신, 교육, 교통 등이 주도
- 2008년 서울지역 가계의 소비지출 중 교육, 의료보건, 교양오락 등 서비스 지출 비중은 38.9%로 1990년 대비 11.0%p 확대
 -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자기계발, 여가활용, 사회적 교류와 소통 등의 욕구충족이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소비의 서비스화 가속화
 - 가계의 서비스지출 비중이 1990~1997년 중 30.6%에서 2000~2008년 중 38.3%로 확대되는데 있어 통신, 교육, 교통 등의 비목이 각각 53.3%, 30.1%, 19.0% 기여
 - 반면, 의료보건과 교양오락은 다른 서비스 관련 비목과 달리 기여율이 -1.5%, -0.9%로 부진
 - 이는 지금까지 서울지역 가계지출의 서비스화가 기존 통념과 달리 여가 활용이나 의료보건과 같은 서비스보다는 정보화 관련 서비스와 교육욕구 충족 등을 위한 서비스에 집중되었음을 시사

<표 1> 기간별 서울지역 가구의 형태별 소비지출 비중과 기여율

(단위: %, 기간내 평균)

	1990~1997	2000~2008	기여율
서비스	30.6	38.3	100.0
의료보건	4.8	4.7	-1.5
교육	10.1	12.4	30.1
교양오락	5.4	5.3	-0.9
교통	8.4	9.9	19.0
통신	1.9	6.0	53.3
비서비스	69.4	61.7	100.0
식료품	30.1	26.1	52.3
주거	4.2	3.6	8.6
광열수도	4.0	5.0	-13.4
가구집기	4.9	3.9	12.2
피복 및 신발	7.1	5.4	22.5
기타지출	19.1	17.8	17.9

주: 서비스지출(비서비스지출)의 각 비목별 기여율은 1990~1997년 대비 2000~2008년 비중 확대(축소)에 대한 각 비목의 영향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 그러나 같은 서비스지출이라도 교육, 교통, 통신 등의 소득탄력성은 차별적
- 통신의 소득탄력성은 2000~2008년 중 0.476으로 식료품(0.562) 등과 같이 필수재화
 - 이는 통신가격의 상대적 하락, 통신장비의 보급 확대 등 정보통신 이용의 대중화에 기인
 - 통신 외에 교통, 의료보건의 소득탄력성도 2000~2008년 중 각각 0.936, 0.805로 통신보다는 약하지만 필수재적 성격을 어느 정도 보유
 - 필수재는 소득탄력성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며, 소득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지출하지만 그 증가율은 점차 감소하는 비목
 - 반면, 교양오락의 소득탄력성은 2000~2008년 중 1.253으로 준선택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향후 소득증대가 뒷받침될 경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
 - 준선택재는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고 1.3보다 작으며, 필수재에 비해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삶의 질 향상 목적으로 주로 구입

비목별 소비함수 추정 모형

▷ 기존 선행연구 결과 등을 참조해 서울지역 가계의 비목별 소비함수를 설정해 소득탄력성을 추정
(분석기간 : 2000~2008년)

$$\ln(C_i^j) = c + b_1 \ln(Y_i) + b_2 A_i + b_3 A_i^2 + b_4 S_i + b_5 E_i + b_6 P_i + b_7 \ln(N_i) + b_8 O_i + e_i$$

C_i^j : i 가구의 j 비목의 소비지출액

Y_i : i 가구의 가처분소득이며 항상소득가설을 반영해 대리변수로 가구별 월평균 소비지출액 사용

A_i, A_i^2 : i 가구 가구주의 연령과 연령 제곱항 S_i : i 가구 가구주의 성별

E_i : i 가구 가구주의 교육수준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면, 1, 아니면 0

P_i : i 가구에 배우자가 있을 경우 1, 없을 경우 0

N_i : i 가구의 가구원수 O_i : i 가구의 주택이 자가소유이면 1, 아니면 0

- 이에 비해 교육의 소득탄력성은 2000~2008년 중 1.331로 나타나 선택재적 성격이 뚜렷
- 선택재는 소득탄력성이 1.3 이상이며 주로 심리적 요인이나 사회적 욕구 등에 의해 소비하게 되고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 측면을 중시
- 이는 가계가 소득이 증가할 경우 우선적으로 교육관련 지출을 확대할 의향이 있고, 교육서비스에 대한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 측면에서 오는 만족감을 더 크게 느낀다는 것을 의미

소비특성은 가구주 연령대, 가구유형 및 소득계층별로 차별화

□ 가구주 연령대별 가계소비 구조를 보면 다소 차별적

- 20대 이하 가구주 가계의 경우 트렌드에 민감하고 여가를 중시하는 젊은 가구주의 가치관을 반영해 기타 연령대와 달리 교양오락 비목의 소비비중(8.0%)이 3대 소비비목에 포함
- 또한 전가구와 비교한 소비구조도 주로 교양오락과 통신, 피복 및 신발, 가구집기 등에 특화
- 30~50대 가구주 가계의 3대 소비비목은 모두 식료품, 교육, 교통이지만, 40대 가구주 가계의 경우 주로 교육에 집중된 형태
- 2008년 40대 가구주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83.4%로 가장 높지만, 교육 지출 비중이 23.3%로 전가구 평균을 10.2%p나 상회하는 반면, 다른 서비스관련 지출비중은 모두 전가구 평균을 하회
- 이는 40대 가구주 가계가 다른 비목에 대한 지출을 최대한 축소하고 교육비목 관련 지출에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 60대 이상 가구주 가계의 3대 소비비목은 식료품, 의료보건, 교통 등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 및 의료복지 수요를 반영
- 2008년 의료보건의 소비비중이 9.1%로 식료품 소비 다음으로 높을 정도
- 한편, 가구주 연령별 가계소비 규모는 40대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은 50대, 30대, 60대 이상, 20대 이하 순

<표 2> 2008년 서울지역 가구주 연령대별 소비수준 및 주요 소비비목

(단위: 만원)

구 분	가구당 월평균 명목 소비지출액		3대 지출비목
		상대적 수준 (전가구 평균=100)	
20대 이하	166.4	69.7	식료품(24.8%), 교통(8.9%) 교양오락(8.0%)
30대	246.1	103.0	식료품(24.6%), 교통(13.0%), 교육(10.4%)
40대	273.4	114.5	식료품(23.0%), 교육(23.3%), 교통(8.4%)
50대	248.4	104.0	식료품(26.2%), 교통(9.9%), 교육(8.2%)
60대 이상	175.8	73.6	식료품(30.5%), 의료보건(9.1%), 교통(7.9%)

주: 3대 지출비목 선정 시 기타지출은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 가구유형별 소비구조를 보면, 일반가구와 맞벌이가구는 전반적으로 전가구와 유사한 형태지만, 노인가구와 모자가구는 다소 차별적
- 노인가구의 소비구조는 주로 식료품, 의료보건 등에 집중된 형태
 - 특히 2008년 식료품 소비비중이 31.1%에 달할 정도로 엔겔계수가 매우 높고, 의료보건 비중도 15.4%에 달함
 - 모자가구의 소비구조는 전가구와 비교해 교육관련 지출에 집중
 - 2008년 교육 비중이 25.8%로 식료품 비중을 상회할 정도
 - 이는 여성 가구주가 생계를 위해 타 기관에 양육 및 교육을 맡기는 경우가 많고 교육에 대한 관심도 여타 가구에 비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 한편, 가구유형별 소비수준은 맞벌이가구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일반가구, 모자가구, 노인가구 순
- 2008년 맞벌이가구의 월평균 명목 소비지출액은 전가구 평균의 1.2배 수준인 반면, 노인가구의 명목 소비지출액은 60.3%에 불과

<표 3> 2008년 서울지역의 가구유형별 소비수준 및 주요 소비비목

(단위: 만원)

구 분	가구당 월평균 명목 소비지출액	상대적 수준 (전가구 평균=100)	3대 지출비목
노인가구	143.9	60.3	식료품(31.1%), 의료보건(15.4%), 광열수도(6.7%)
모자가구	200.8	84.1	교육(25.8%), 식료품(22.4%), 통신(5.8%)
맞벌이가구	276.3	115.7	식료품(24.1%), 교육(15.3%), 교통(11.3%)
일반가구	233.5	97.7	식료품(26.1%), 교육(12.2%), 교통(9.7%)

주: 3대 지출비목 선정 시 기타지출은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 소득계층별 소비구조를 보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식료품 비중이 높아지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교육 비중과 교통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
- 저소득층 가구의 소비구조는 전가구 평균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등 기초생계유지를 위한 비목의 비중이 높으며, 교육비 지출은 다소 낮은 편
 - 반면, 중산층 가구의 소비구조는 전반적으로 전가구 평균과 유사하며, 고소득층 가구는 상대적으로 교육, 교통, 교양오락의 지출비중이 높은 편
 - 한편, 2008년 저소득층의 소비수준은 전가구 평균의 58.4%에 불과한 반면, 고소득층은 1.59배에 달하여 소비에 있어 사회적 위화감 조성이 우려되나, 소비불균형 정도가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
 - 지니계수로 본 서울지역 가계의 소비불균등지수는 1990~1997년 중 0.283에서 2000~2008년 중 0.273로 오히려 소폭 하락

- 다만, 2003년 이후 전반적으로 소비불균등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비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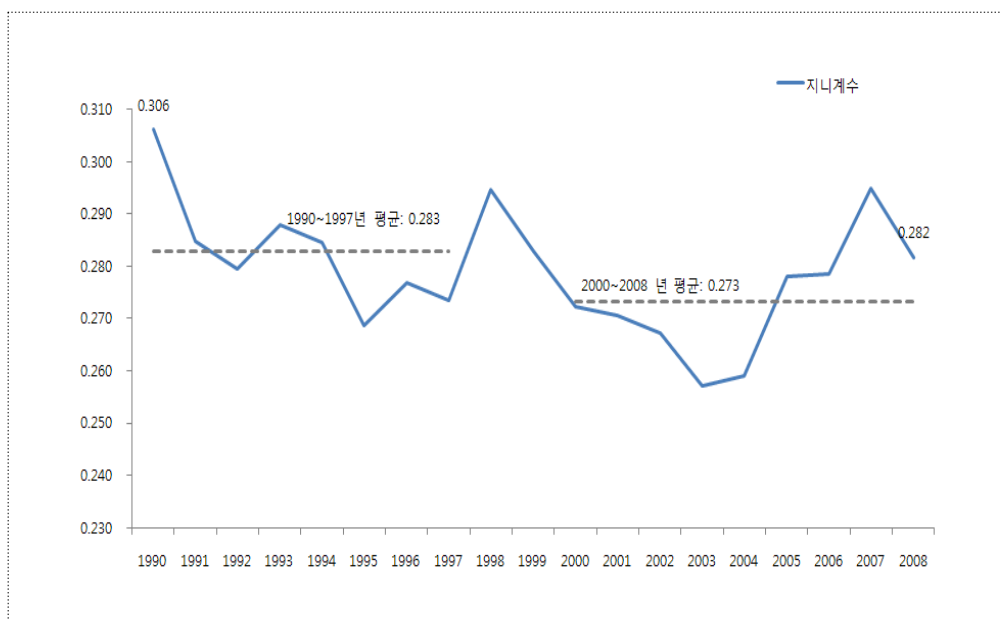
<표 4> 2008년 서울지역의 소득계층별 소비수준 및 주요 소비비목

(단위: 원)

구 분	가구당 월평균 명목 소비지출액	상대적 수준	3대 지출비목
		(전가구 평균=100)	
저소득층	139.6	58.4	식료품(28.9%), 교육(8.0%), 교통(7.6%)
중산층	235.2	98.5	식료품(26.4%), 교육(13.5%), 교통(9.0%)
고소득층	380.0	159.1	식료품(22.7%), 교육(13.6%), 교통(11.4%)

주 : 3대 지출비목 선정 시 기타지출은 제외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8] 서울지역 가계의 소비불균등지수 추이

Ⅲ. 정책적 시사점

경제정책 수립 시 소비의 중요성과 소비패턴 변화를 고려

- 일반적으로 소비는 가계의 생활수준과 후생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한 도시의 생산구조와 산업구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 가계의 소비지출구조 변화는 생산 및 고용유발 경로를 통하여 산업구조의 변화를 초래
 -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비행태는 의류, 식료품 등의 생필품과 같은 비내구재에서 자동차, 가전제품과 같은 내구재로, 그리고 내구재에서 서비스부문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임
- 특히 서울의 경우 여타 시·도에 비해 높은 소비규모나 소득 대비 소비수준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서울경제의 발전에 있어 소비의 역할이 매우 중요
 - 2009년 서울의 민간소비 규모는 152.1조원으로 2000년 대비 1.8배 확대
 - 2009년 지출측면에서 본 경상 GR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59.1%로 가장 크고, 2000년 대비 4.7%p 확대
 - 서울의 1인당 민간소비지출액(명목기준)은 2009년 15,160천원으로 전국 평균(11,850천원)의 1.29배에 달할 뿐 아니라 전국 최고수준
 - 서울의 1인당 개인소득 대비 1인당 민간소비지출액도 0.96으로 경기도 (0.96)와 더불어 전국 16개 시·도 중 최고수준
- 따라서 소비증진을 통해 시민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서울경제의 성장활력도 제고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

<표 5> 주요 정책방향

정책목표	정책방향
소비의 서비스화를 고려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보건 산업 육성, 특히 U-헬스케어산업의 조기 산업화 - 온라인 교육서비스(e-learning) 및 교육콘텐츠 산업 육성과 출판, 미디어콘텐츠 등과의 유기적 연계성 강화 - 문화콘텐츠, 스포츠 등의 레저산업을 적극 육성하되, 다양한 소비층을 염두에 둔 서비스 개발
가구 속성별 소비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의료보건 복지서비스 확대 - 모자가구를 포함한 여성가구주 가계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보육서비스 확대

소비의 서비스화를 고려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 소비의 서비스화를 고려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소비-생산-소득'의 선순환적 구조를 강화
 - 향후 서울지역 내 소비구조 변화는 산업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생산활동 진작은 고용확대와 더불어 가계소득에 영향을 줌
 - 또한 증대된 소득은 다시 소비를 촉진하는 선순환적 구조를 형성
- 고령화 추세, 성인병 및 암 등의 발병률 증가 등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향후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의료보건 산업을 적극 육성
 - 2000~2008년 중 서울지역 전가구 의료서비스의 소득탄력성은 0.805이나,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2006년 0.780 → 2008년 0.844)
 - 의료서비스의 취업유발계수도 12.4(명/10억)로 서비스 산업 중 비교적 높은 수준의 고용유발효과를 가지고 있음
 - 특히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 변화, U-IT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할 때, U-헬

스케어산업을 조기에 육성하여 산업화할 필요

- 현재 U-헬스케어산업은 세계적으로 시장형성의 초기단계이므로 국내의 우수한 IT관련 인프라, 지역 내 우수한 의료기반시설 등을 잘 활용하면 조기에 산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 등으로 향후 교육서비스는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

- 서울지역 교육서비스의 소득탄력성은 1.331로 11개 비목 중 최고 수준
- 교육의 경우 취업유발효과가 18.4(명/10억원)로 고용유발도 기대
- 학원 등 오프라인 위주의 교육산업에서 탈피해 유아 - 학생 - 직장인 - 노인 등 생애별 온라인 교육서비스(e-learning) 및 교육콘텐츠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출판, 미디어콘텐츠 등의 연관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
- 강남 등 특정 지역에 편중된 사교육기관 위주에서 벗어나 강북 등 모든 지역의 사교육에 대한 욕구를 일부 해소하는 방안으로 활용

□ 향후 소득증가와 여가에 대한 니즈 증대를 감안하여 문화콘텐츠, 스포츠 등의 레저산업을 적극 육성하되, 다양한 소비층을 염두에 둔 서비스를 개발

- 교양오락에 대한 소득탄력성은 1.253으로 향후 소득증가 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
-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교양오락의 소비비중이 증가함을 고려하여, 고소득층 수요를 반영하는 고급 문화산업(오페라 및 오페라 등)을 개발
- 저소득층의 경우 여가선용을 위한 체험형 레저(북한산 둘레길, 서울 성곽길, 서울 숲 등)의 개발과 문화 바우처 발행을 통해 접근성을 제고

가구 속성별 소비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현

- 가구 속성별 소비패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현으로 시장 내 유효소비 진작
 - 가령, 저소득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의료보건 복지서비스 확대와 여성가家主 가계를 위한 사교육비 절감책 등 복지정책의 타깃을 명확히 설정
- 저소득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기건강검진, 원외약제비 지원, 간병 지원 등 의료보건 복지서비스 확대
 - 고령화 추이를 고려할 때, 향후 독거노인가구를 포함한 노인가구의 의료복지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우려
 - 서울지역의 노인가구 비중은 1998~1999년 3.1%에서 2000~2005년 3.5%, 2006~2008년 3.9%로 확대되는 추세
 - 2008년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 및 노인가구의 의료보건 소비비중은 각각 9.1%, 15.4%로 모든 가구유형 중 최고수준
- 모자가구를 포함한 여성가家主 가구는 교육 및 보육서비스 확대를 통해 가계의 안정성 제고
 - 공교육 기반강화 및 저소득층 대상의 교육바우처 사업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을 축소
 - 여성가家主 가구의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취학전 자녀의 보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
 - 서울의 여성가家主 비중은 1990년 12.0%에서 2008년 20.1%로 확대
 - 여성의 안정적 사회활동 지원을 목표로 서울형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에서 표준 프로그램 발굴 및 제공 등 질적 확대에 정책초점을
맞출 필요

· 특히 여성가구의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만 2
세 이하의 영아 보육을 위한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확충

김범식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76

kbs@sdi.re.kr